

2006년 10월13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도권 성장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전략**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포함하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전략도시의 건설
- ②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
- ③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
- ④ 낙후지역을 국토의 새로운 활력지역으로 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포함하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전략도시의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서울에 위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충남 연기, 공주지역에 건설되는 자립형 신도시로서 인구 40~50만 명을 수용할 계획임
-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시, 도에 건설하는 신도시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개발되는 지역의 혁신거점으로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임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지역개발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남 무안 등 6개 지역에 건설되는 신도시로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 등의 유형으로 개발됨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

- 혁신클러스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기능,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기능, 그리고 기업의 생산기능이 긴밀히 연계되는 지역혁신체제의 정립을 요구함

○ 수도권외 계획적 성장관리

- 수도권 성장관리의 목적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외의 질적 발전을 통하여 동북아 및 세계의 대도시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지역을 국토의 새로운 활력지역으로 변화

- 농어촌형 지역혁신체제 구축, 인프라 확충, 산업의 융합촉진,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5도2촌 사업¹⁾의 활성화, 낙후지역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효율화등을 추진

■ 문제점

✓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산발적 추진됨으로 인하여 비효율성 발생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이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지방대학 인력양성사업 등이 다수의 부처에서 경쟁적, 중복적으로 추진됨
- 따라서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정책들이 서로 보완관계를 지니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전체적 효율성이 떨어짐. 부처간의 협의제도 형식적이며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한 실정임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규모 및 확보방안이 불확실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기간(2004-2008)중 총 투자규모는 66조 5,732억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5년도의 총 투자계획 금액은 13조 2,164억원으로 집계됨. 2005년도 사업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약 5조4,930억원으로 나머지7조7,234억은 일반회계나 지방비, 혹은 민자로 조달하여야 함

1) 도시민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주말동안 농촌에서 체류 활동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전략도시 개발을 포함하는 광역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재정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줄여야 할 것임

✓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시간과 비용 낭비**

-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있어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전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혁신도시와 같이 광역단위의 합의형성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하면, 신활력사업과 같이 소단위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한 사업도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이 문제가 됨.

✓ **수도권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규제로 인한 성장동력의 억제**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규제를 두고 있음.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청라지구 538만평과 송도지구 1,076만평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영종지구 4,184만평과 송도지구 535만평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제되어 총 6,333만평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실정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설입지에 대한 규제로는 대학, 공장, 산업단지, 공공청사, 대규모개발사업, 연수시설 등의 신설, 증설을 제한하고 세제에 있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세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를 받아오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획을 보면 서울시의 세계도시화 프로젝트와 함께 인천시의 동북아 관문도시화, 경기도의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지방발전-후수도권 대책으로는 수도권의 공동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금과 같은 규제는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동시에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대 안

○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

- 현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은 국가의 기본틀을 바꾸는 정책으로 100년 이상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과학중심사회의 구축 등 기존의 국가정책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정책들이 서로 보완관계를 지니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전체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대책을 동시에 추진

- 수도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